

원자력사업의 국민이해 제고 방안

-환경단체의 인식 태도를 중심으로-

이 용 수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객원 교수



환 경 문제의 출발은 기술과 산업에 의해 생산되는 물리적 부산물의 발생에 있다.

오늘날 지구상 어느 곳이나 환경 문제로부터 예외가 되는 지역은 없다.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등 국지적인 문제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대기 오염과 산성비,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현상은 국경과 지리적인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도 60년대에 눈뜨기 시작한 경제 개발에의 욕구와 70년대를 통해 지속되어 온 성장 드라이브 정책의 결과 환경 오염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럼에도 이것을 하나의 사회 문제로 인식하려는 노력은 한동안 움트지 못했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정치 사회적 민주화는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상의 문제 제기와 인식 확산을 촉발하였고, 낙동강 폐놀 유출 사건은 일부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만 문제시 되어오던 공해 문제를 불특정 다수 일반 대중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까지 끌어들이었다.

사회 체제에 대해 다소 저항적이고 진보적인 소수의 인사들에 의해 주도된다고 생각되었던 환경 문제에 많은 대중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환경 운동가에게 호의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 환경 단체가 한층 더 대중적

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은 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세계 환경 회의였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를 내걸었던 이 회의는 90년대에 들어 관심이 깊어진 새로운 21세기에의 기대와 불안, 제 1·2차 세계대전으로 시작되었던 20세기 인류사의 족적을 돌아보는 자성적 분위기와 함께 환경 문제를 범지구적이고 세기말적인 입장에서 보게 하였다.

이 회의에 한국도 많은 환경단체가 참가하였고 비로소 비정부기구(NGO)라는 조직이 현대 사회의 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97년말 일본 교토에서 열렸던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온실 가스 규제에 대한 구체안이 마련되어 이제 그 나라의 환경 보전 능력은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한국은 아직

규제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한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이 화력 발전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교토 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했던 많은 민간 환경 단체들은 국제 사회에 대하여 온실 가스 배출 억제와 함께 원자력 발전의 추진 역시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처럼 원자력 분야 또한 환경 단체의 관심이 큰 분야이며,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국민들의 반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환경 단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책 추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조사는 원자력에 대한 환경 단체의 인식을 통해 합의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이 조사는 97년 말 현재 환경부에 민간 환경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100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환경의 의미가 매우 포괄적이고 학문적인 의미에서나 실무적인 의미에서 계속 그 범위가 확장되어 왔기 때문에 환경 단체라는 범주 내에서도 그 단체의 성격이나 사업 내용은 매

우 다양하다.

단체의 명칭만으로는 사업의 내용과 구체적인 활동 방법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개괄적인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 내에서 직접 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 부서에 따라 등록된 환경 단체를 구분해 보면 <표 1>과 같다.

단일 부서로서 환경 단체를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환경 교육과다. 산업폐수과나 소음진동과 등 구체적인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보다 포괄적인 정책 전반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 단체가 수적으로는 훨씬 많다.

이 조사 대상의 기본 단위는 단체이다. 따라서 단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각 단체의 대표자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면접 설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가 공식적인

대표자는 비상근직으로 위촉되어 대외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체의 성격이나 견해는 실무 책임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다.

물론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경우는 직접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실무진에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일부 단체의 경우 응답자의 제안 또는 동의하에 방문에 의하지 않고 우편·팩스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조사는 97년 12월 10일~12월 25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환경부에 등록된 기록과는 달리 주소나 전화 번호가 변경되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69개 단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중 기록이 부실한 4건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는 65건에 대한 자료를 SPSS(Statistical

<표 1> 환경 단체 등록 현황(97년 말 현재)

담당 부서	단체수	담당 부서	단체수	담당 부서	단체수
정책총괄과	12	총무과	1	폐기물관리과	4
환경교육과	25	수질정책과	7	폐기물시설회	1
기술정책과	5	수도정책과	4	폐기물재활용과	9
기술지원과	5	음용수관리과	1	대기정책과	1
평가제도과	3	산업폐수과	1	소음진동과	2
해외협력과	2	유독물질과	1	자연정책과	3
전산통계과	1	폐기물정책과	1	자연생태과	8
토양보전과	3	-	-	계	100

주: 자료: 환경부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항목별로 관련 변수와의 교차표를 작성하고 변수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경우($p < 0.05$)에는 p값을 제시하였다. 이하 이들 65개 단체를 조사 대상 단체로 표현하였다.

분석 자료의 특성

국내 환경 운동이 급격히 확산되고 민간 환경 단체의 발족이 급증한 것은 사회적 민주화 시기와 관련이 깊다. 즉 80년대 후반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가 진전되고 환경 문제 또한 공동체적인 해결 과제라는 의식이 퍼지면서 급속한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

이 조사의 자료에서도 85년 이전 설립된 단체는 9.5%에 불과하나 90년 이후 10년이 못되는 기간 동안에

설립된 단체의 비율이 약 70%에 이른다.

환경 단체의 연륜이 짧고 많은 수의 단체가 단기간에 발족되었다는 것은 국내 환경 운동이 그 역할이나 기능면에서 아직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또 많은 단체들의 성격이 비슷비슷하여 단체 나름의 분명한 특성과 목표를 갖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 준다.

회원의 수는 단체의 외형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회원 개인이 얼마나 그 단체의 이념을 설정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는 규모가 커질수록 반비례하여 낮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는 환경 문제의 해결에 의욕을 가진 소수의 발기인 또는 운영진 이 사업의 목적을 정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개인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본 조사 대상 단체의 회원 수 규모

는 매우 다양하여 십 수명으로부터 수 만 명에 이르는데, 약 500명을 기준으로 하면 대체로 회원수가 그 이하인 단체와 그 이상인 단체로 양분된다.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종사하고 있는 상근 직원의 수는 지부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조사 대상 단체의 평균 직원 수는 9.2명이었다. 그러나 단체들 중 약 80%에는 7명 이하의 상근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에서의 평균 직원 수는 3.9명이었다.

설립 목적이나 활동을 밝힌 62개 환경 단체들이 가장 중요하게 들고 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계몽 사업'(29.0%)과 '전문 지식에 의한 정책 대안 제시'(29.0%)이고, 그 다음은 '회원들에 대한 이익/권리 추구'(24.2%)와 '회원과 일반인에 대한 정보 제공'(24.2%) 등이다.

반면 '갈등 집단간의 중재' 역할을 주된 설립 목적이나 활동으로 삼고 있는 단체는 4.8%에 불과해 갈등 해결 기능이 취약한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 단체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회비, 찬조금, 수익 사업 또는 정부 지원 등의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단체가 회비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으며(71.0%), 찬조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경우는 37.1%, 수익 사업을 통해 재정을

(표 2) 조사 대상 환경 단체의 일반적 특성

설립 시기별				회원 수별			상근 직원수별		
설립년도	단체수	%	누적 %	회원수	단체수	%	직원수	단체수	%
~79	4	6.3	6.3	~49	7	13.2	없음	1	1.6
80~84	2	3.2	9.5	50~99	5	9.4	1명	3	4.8
85~89	13	20.7	30.2	100~499	16	30.2	2~4명	24	38.7
90~94	24	38.1	68.3	500~999	7	13.2	5~9명	23	37.1
95~	31.7	31.7	100.0	1,000~	18	34.0	10명 이상	11	17.8
미상	2	-	-	미상	5	-	미상	3	-
계	65	100.0	-	계*	58	100.0	계	65	100.0

주 : * 7개 단체는 회원사제를 채택

〈표 3〉 단체의 설립 시기별 활동 목적 채택 내용

활동 목적	89년 이전		90~94년		95년 이후		계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회원과 일반인에 대한 정보 제공	3	15.8	9	37.5	3	15.8	15	24.2
공공 이익을 위한 계몽 사업	6	31.6	7	29.2	5	26.3	18	29.0
회원에 대한 이익/권리 추구	5	26.3	6	25.0	4	21.1	15	24.2
갈등 집단간의 중재	1	5.3	1	4.2	1	5.3	3	4.8
전문 지식에 의한 정책 대안 제시	4	21.1	6	25.0	8	42.1	18	29.0
설립 단체수	19	-	24	-	19	-	62	-

주 : 한 단체가 2가지 이상의 활동 목적을 채택한 경우는 중복 집계하였음

〈표 4〉 단체의 설립 목적별 재정 총당 방법

재정 총당 방법	정보 제공		대중 계몽		권리 추구		갈등 중재		대안 제시		계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정부 지원	2	13.3	3	16.7	-	-	-	-	1	5.9	6	9.7
회비	11	73.3	13	72.2	13	92.9	3	100.0	11	64.7	44	71.0
찬조금	7	46.7	8	44.4	2	14.3	1	33.3	9	52.9	23	37.1
수익 사업	1	6.7	6	33.3	2	14.3	-	-	4	23.5	14	22.6
계	15	-	18	-	14	-	3	-	17	-	62	-

주 : 한 단체의 재정 총당 방법이 2가지 이상인 경우는 중복 집계하였음

〈표 5〉 단체의 설립 목적별 목표 달성 방법의 이용도 평균치(%)

목표 달성 방법	정보 제공	대중 계몽	권리 추구	갈등 중재	대안 제시	계	
						평균	S.D
정부와의 접촉 및 대화	20.0	18.8	34.2*	36.6	21.5	23.5	17.5
해당 기관 대상 정보 제공	13.0	12.3	16.7	6.6	9.6	13.7	12.4
시위·압력 등 실력 행사	4.0	5.8	5.3	3.3	9.0	6.7	10.6
매스컴 이용 의견 제시	13.6	10.2	4.2*	5.0	17.5	12.5	13.2
다른 단체와의 연대	12.3	15.8	6.7	11.6	13.1	12.3	13.1
회원간 토론, 사회 계몽	29.3	35.5	25.0	36.6	25.3	27.5	21.9
기타	7.6	1.0	7.5	-	3.3	3.3	1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단체수	(15)	(17)	(14)	(3)	(16)	(58)	-

주 : *: P=0.007

충당하고 있는 단체는 22.6%였으며 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9.7%였 이 문제에 대해 96년 한국환경기

술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 환경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의 87.5%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환경 전문가들도 82.6%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의 설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 한 결과 58개 단체가 응답하였는데, 이들 단체들에서 '회원간의 토론과 사회 계몽'의 이용도가 평균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 기관과 접촉 및 대화' (평균 23.5%)를 중시하였고 '시위·압력 등 실력 행사'를 이용하는 비중은 평균 6.7%였다.

환경단체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단체의 주된 설립 목적에 따라 나누어 보면, 특히 '회원들의 이익과 권리 추구'를 위해 설립된 단체들의 경우 다른 단체들에 비하여 '정부와의 접촉 및 대화'에 적극적인 반면 '매스컴을 통한 의견 제시'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권리 추구를 목표로 하는 단체들은 그렇지 않은 단체들과 활동 방법의 이용도면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환경 단체들이 정부 및 공공 기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분류해 보면 정부나 공공 기관으로부터 '인·허가나 규제 또는 행정

지도를 받는 관계에 있다' (35.1%)는 단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 장려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3.3%), '잘못을 비판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노력' (19.3%), '정부 기관의 정책 자문이나 심의를 담당' (17.5%) 하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단체들의 정부 또는 공공 기관과의 관계를 그 단체의 주된 설립 목적에 따라 나누어 보면 '회원들의

권리나 이익을 추구' 하는 단체는 그렇지 않은 단체에 비하여 '정부의 인허가나 규제 또는 행정 지도'를 받는 관계에 있는 단체가 많고(64.3%), '전문 지식에 의한 대안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그렇지 않은 단체에 비하여 '잘못을 비판하고 바로 잡음'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가 많았다(41.2%).

전체적으로는 환경 단체들의 활동이 원자력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데 대하여 41.5%가 '매우 동감한다'고 응답하였고 50.8%가 '동감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점은 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라 서로 큰 차이가 없이 공통된 견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원자력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과정에 환경 단체의 견해와 입장이 보다 큰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원자력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경 단체의 판단은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 가는 과정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한다.

민간 환경 단체가 국민과 정책 당국, 또는 과학자나 전문가들 사이에 가로 놓인 의사 소통의 장애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완충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꾸준히 서로의 의도와 입장을 전달하면서 합의를 위한 간격을 줄일 수 있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 단체들은 오늘날의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학 기술이 기여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이 점은 일부 생태주의자들이 현대의 문명 자체를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자연으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경단체들은 기본적으로 과학 기술의 순기능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인식 역시 단체의 설립 목적과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

〈표 6〉 단체의 설립 목적별 정부 및 공공 단체와의 관계

공공 기관 관계	정보 제공		대중 계몽		권리 추구		갈등 중재		대안 제시		계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인허가, 규제, 행정 지도를 받음	4	28.6	5	33.3	9	64.3*	1	33.3	3	17.6	20	35.1
정책 자문, 심의를 담당함	3	21.4	2	13.3	3	21.4	-	-	4	23.5	10	17.5
정책 장려 등의 정보를 제공함	6	42.9	5	33.3	2	14.3	1	33.3	9	29.4	19	33.3
잘못을 비판하고 바로잡음	2	14.3	3	20.0	2	14.3	1	33.3	7	41.2*	11	19.3
단체수	14	-	15	-	14	-	3	-	17	-	57	-

주 : 1. 한 단체의 공공 기관과의 관계가 2가지 이상인 경우는 중복 집계하였음
2. *: p < 0.05

〈표 7〉 단체의 설립 목적별 원자력 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인식(환경 단체가 원자력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대한 태도)

영향력 정도	정보 제공		대중 계몽		권리 추구		갈등 중재		대안 제시		계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매우 공감함	7	46.7	7	36.8	6	40.0	1	33.3	11	61.1	27	41.5
공감하는 편임	8	53.3	10	52.6	7	46.7	2	66.7	7	38.9	33	50.8
공감하지 않음	-	-	1	5.3	1	6.7	-	-	-	-	3	4.6
모르겠다	-	-	1	5.3	1	6.7	-	-	-	-	2	3.1
계	15	100.0	19	100.0	15	100.0	3	100.0	17	100.0	65	100.0

났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환경 단체들도 국내의 자원 빈국의 현실적인 여건 아래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조사 대상 단체의 43.8%가 원자력 발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40.6%가 필요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시각을 달리하는 단체는 10개(15.6%)였다.

단체의 주된 설립 목적별로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구분해 보면 '전문 지식에 의한 정책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 단체들의 긍정적 인 인식이 비교적 약해서 다른 단체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97년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한국궐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민들은 91.4%라는 절대 다수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국내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반 국민이나 환경 단체 모두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발전 방식으로서의 경제성

원자력 발전이 경제적인 발전 방식

(표 8) 단체의 설립 목적별 과학 기술의 환경 문제 해결 가능성 여부(과학 기술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대한 태도)

영향력 정도	정보 제공		대중 계몽		권리 추구		갈등 중재		대안 제시		계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매우 동감함	12	80.0	15	78.9	12	80.0	2	66.7	14	77.8	50	76.9
동감하는 편임	2	13.3	4	21.1	3	20.0	1	33.3	3	16.7	13	20.0
동감하지 않음	1	6.7	-	-	-	-	-	-	1	5.6	2	3.1
계	15	100.0	19	100.0	15	100.0	3	100.0	17	100.0	65	100.0

(표 9) 단체의 설립 목적별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원전의 필요성	정보 제공		대중 계몽		권리 추구		갈등 중재		대안 제시*		계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매우 필요함	8	53.3	8	41.9	9	60.0	-	-	3	17.6	28	43.8
약간 필요함	6	40.0	8	42.1	5	33.3	3	100.0	9	52.9	26	40.6
필요하지 않음	1	6.7	3	15.8	1	6.7	-	-	5	29.4	10	15.6
계	15	100.0	19	100.0	15	100.0	3	100.0	18	100.0	65	100.0

주 : * : p=0.038

(표 10) 단체의 설립 목적별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에 대한 인식(원자력 발전이 경제적인 발전 방식이라는 데 대한 태도)

원전 경제성에 대한 인식	정보 제공		대중 계몽		권리 추구		갈등 중재		대안 제시*		계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매우 공감함	3	20.0	4	21.1	1	6.7	-	-	1	5.6	9	14.1
동감하는 편임	8	53.3	11	57.9	10	66.7	2	66.7	7	38.9	37	57.8
동감하지 않음	4	26.7	4	21.1	4	26.7	1	33.3	10	55.6	18	28.1
계	15	100.0	19	100.0	15	100.0	3	100.0	18	100.0	64	100.0

주 : * : p=0.009

이라는 데 대해서 매우 동감한다는 응답은 14.1%였고, 57.8%는 동감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도 유사한 내용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데 일반 국민들의 66.0%가 원자력 발전이 경제적인데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하였고, 원전 주민들은 68.5%가 원전의 경제성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가 경제적인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대상 환경 단체들 중 '전문 지식에 의한 정책 대안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은 55.6%가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 동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다른 단체들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특히 수입에 의한 외화 유출에 대해서도 민감해졌다.

에너지는 대표적인 외화의 유출 분야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에너지 수입액은 272억 달러로 총 수입액의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수입 원자재나 기자재를 필요로 하는 다른 수출 산업에 비하여 경제적인 에너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외화의 절약을 거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와 환경 관계에 있어 환경 단체는 국내 산업 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이라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기본 설비 투자나 안전 대책, 폐로 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경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볼 수 있었으나, 원자력 발전이 경제적이란 데 대해서도 대체적으로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주로 정책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 단체 중 약 10여개 단체와의 커다란 시각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하는 것이 합의 형성의 과제로 집약된다.

3. 지구 온난화 방지 효과

원자력 발전을 이용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대해 23.8%가 매우 동감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0.8%는 동감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최근의 거듭된 국제 회의와 구체적인 규제 안의 마련, 한국에 대한 규제 대상국의 포함 여부 보도 등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졌고, 화석 연료의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주요인이라는 것도 이제는 거의 상식화되었다.

발전 분야에서는 원자력을 이용함으로써 화력 발전에서 사용하는 연료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게 된

다는 것이 원자력계의 입장이다.

물론 발전 분야에서의 연료 대체만으로는 전체 지구 온난화 방지에 대한 기여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으나 원자력이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의 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음은 사실이다.

과거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조사에서는 학력이 높고 화이트칼라 직업을 가진 계층에서 이러한 인식이 보다 강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지구 온난화 문제에 있어 환경 단체는 대체 에너지의 개발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원자력 이외의 대체 에너지 개발로 현재의 에너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있다는 데 대해 환

〈표 11〉 원자력 발전의 지구 온난화 방지 효과에 대한 인식

지구 온난화 방지 효과	환경 보전을 위한 과학 기술의 필요성						계	
	매우 필요함		약간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매우 동감함	15	31.3	-	-	-	-	15	23.8
동감하는 편임	23	47.9	8	61.5	1	50.0	32	50.8
동감하지 않음	10	20.8	5	38.5	1	50.0	16	25.4
계	48	(76.2)	13	(20.6)	2	(3.2)	63	100.0

주: χ^2 p=0.146

〈표 12〉 대체 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문제 해결 가능성

대체 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문제 해결 가능성	환경 보전을 위한 과학 기술의 필요성						계	
	매우 필요함		약간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매우 동감함	11	22.9	2	20.0	-	-	13	21.7
동감하는 편임	33	68.8	7	70.0	2	100.0	42	70.0
동감하지 않음	4	8.3	1	10.0	-	-	5	8.3
계	48	(80.0)	10	(16.7)	2	(3.3)	60	100.0

주: χ^2 p=0.917

경 단체의 21.7%가 매우 동감한다고 응답하였고 70.0%는 동감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4. 설계 및 구조상의 안전성

환경 단체들이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원자력 발전이 설계나 구조상 안전하다는 데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5.0%가 동감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가에 따라

(표 13) 원전의 구조나 설계상의 안전성 인식(원전이 구조나 설계상 안전하다는 데 대한 태도)

설계/구조상의 안전성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계	
	매우 필요함		약간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매우 동감함	1	4.2	-	-	-	-	1	1.7
동감하는 편임	16	66.7	10	38.5	-	-	26	43.3
동감하지 않음	7	29.2	16	61.5	10	100.0	33	55.0
계	24	(40.0)	26	(43.3)	10	(16.7)	60	100.0

주: p=0.003

(표 14) 체르노빌형 사고 발생 가능성 인식

체르노빌형 사고 발생 가능성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계	
	매우 필요함		약간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매우 동감함	3	12.0	10	38.5	8	80.0	21	34.4
동감하는 편임	19	76.0	12	46.2	2	20.0	33	54.1
동감하지 않음	3	12.0	4	15.4	-	-	7	11.5
계	25	(41.5)	26	(42.6)	10	(16.4)	61	100.0

주: p=0.003

(표 15) 원전 건설 및 운영시 중시해야 할 사항

원전 건설/운영시 중시할 사항 (중복 응답)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계	
	매우 필요함		약간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경제성	10	35.7	5	19.2	2	20.0	17	26.6
안전성	24	85.7	25	96.2	9	90.0	58	90.6
기술 자립	6	21.4	2	7.7	-	-	8	12.5
환경 공해	14	50.0	19	73.1	8	80.0	41	64.1
기타	1	3.6	-	-	-	-	1	1.6
계	28	-	26	-	10	0	64	-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즉 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단체는 원전의 설계나 구조상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모두 동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함으로써 이 두 가지 인식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원전의 설계나 구조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을 받아들이는 데 기본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원전이 실제로 안전한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과거 원자력에 대한 여론 조사 자료들을 살펴봐도 일반 국민들 중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 30~35% 정도인데 비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5% 정도이다. 즉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더 우세하다. 환경 단체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원전에 대한 안전성 인식이 50% 내외로서 안전성을 부정하는 사람보다 비율이 높다는 것은 대조를 이루는 현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34.4%가 매우 동감한다는 입장이고 54.1%가 동감하는 편이라는 입장에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역시 원전의

(표 16) 국내 원자력 발전 기술 수준에 대한 인식

국내 원전 기술 수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계	
	매우 동감함		동감하는 편임		동감하지 않음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선진국 수준임	1	100.0	14	58.3	4	12.9	19	33.9
약간 뒤떨어짐	-	-	9	37.5	11	35.5	20	35.7
크게 뒤떨어짐	-	-	1	4.2	16	51.6	17	30.4
계	1	(1.8)	24	(42.9)	31	(55.4)	56	100.0

주: p=0.0004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단체들은 모두 체르노빌형 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오늘날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중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서구에서의 원자력 정책이 퇴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었다.

사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 대중이나 비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모두 체르노빌에서와 같은 사고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체르노빌 사고란 모든 원전 사고의 대표적 유형인 것처럼 인식되고 원전이 결코 안전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실례로서 원전 반대자들에 의해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오늘날 원전을 잠재적인 공포의 대상물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데 실증적인 상징이 되어버렸다.

체르노빌에서의 사고 과정이 서방의 원전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으나 일반 대중과 환경 단체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일반 대중의 원전 수용을 위한 기본 전제라는 점은 다른 설문에서도 증명된다.

즉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시해야 할 요건으로서 '안전성' (90.6%)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다음은 '환경 공해' (64.1%)가 지적되었다.

이 두 가지에 비하면 '경제성' (26.6%), '기술 자립' (12.5%) 등을 지적하는 비율은 훨씬 적었다.

안전성은 곧 사고 발생의 가능성에 따른 것이고, 환경 공해는 방사능 유출에 대한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안은 국내 원전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와도 관련된다.

조사 대상 환경 단체들의 약 3분의 1은 국내 원전 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33.9%), 약 3

분의 1은 약간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35.7%), 나머지 3분의 1은 크게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30.4%).

이들 중 원전의 구조나 설계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단체들은 국내 원전 기술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원전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보이는 단체들은 원자력 발전 자체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국내 기술 수준에 대해서도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방사선 및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인식

환경 단체들은 대체로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상태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69.1%).

이러한 비율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55.0%)보다 더 높은 것이며, 이들 두 항목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chi-square = 20.586).

환경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단 위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방사성 폐기물이란 원래 취급 자체가 위험하고 안전한 처리가 불가능한 물질로 간주하기도 한다.

다른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 관리 상태를 매우 불안시하는 사람이 57.7%나 되고

〈표 17〉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상태에 대한 인식

방사성 폐기물 관리 상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계	
	매우 동감함		동감하는 편임		동감하지 않음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매우 안전함	-	-	-	-	-	-	-	-
안전한 편임	1	100.0	14	60.9	2	6.5	17	30.9
안전하지 않음	-	-	9	39.1	29	93.5	38	69.1
계	1	(1.8)	23	(41.8)	31	(56.4)	55	100.0

주 : p=0.0000

〈표 18〉 원전 주변 방사능 유출에 대한 인식

방사능 유출이 없다는 데 대한 인식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계	
	매우 동감함		동감하는 편임		동감하지 않음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매우 동감함	-	-	1	4.2	-	-	1	1.8
동감하는 편임	1	100.0	9	37.5	2	6.3	12	21.1
동감하지 않음	-	-	14	58.3	30	93.8	44	77.2
계	1	(1.8)	24	(42.1)	32	(56.1)	57	100.0

주 : * : p=0.08

〈표 19〉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	환경 단체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계	
	매우 동감함		동감하는 편임		동감하지 않음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발전소 부지에 쌓아둠	1	4.5	1	3.4	-	-	2	3.7
부지 선정 후 영구 처분함	18	81.8	27	93.1	3	100.0	48	88.9
기타	3	13.6	1	3.4	-	-	4	7.4
계	22	(40.7)	29	(53.7)	3	(5.6)	54	100.0

주 : * : p=0.668

〈표 20〉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법	환경 단체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계	
	매우 동감함		동감하는 편임		동감하지 않음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재처리 후 사용	15	68.2	15	57.7	2	66.7	32	62.7
영구 처분 폐기	6	27.3	11	42.3	1	33.3	18	35.3
기타	1	4.5	-	-	-	-	1	2.0
계	22	(43.2)	26	(51.0)	3	(5.9)	51	100.0

주 : * : p=0.680

(93년,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자신의 거주지 내에 설치를 반대하는 시설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1위로 꼽는 실정이다(96년,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러한 현상은 보통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말할 때의 중·저준위 폐기물의 실체와 대중의 인식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원전으로부터는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22.9%의 단체만이 동감하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단체는 원전 주변에서 항상 방사능이 누출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전의 안전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방사능 누출에 대한 인식도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환경 측정망을 가동하고 수년간에 걸친 역학 조사를 통해서 원전 주변이 다른 대조 지역에 비해 방사능에 따른 위험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내린 결론과는 달리, 환경 단체가 정상 가동중인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 사업이 안고 있는 인식상의 격차이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부지를 선정하여 영구 처분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으나(88.9%), 사용후 핵연료는 재처리하여 원전의 새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62.7%).

발전소 내에 방사성 폐기물을 쌓아 두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보관에 지나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또한 필요한 일이다.

이 점에 있어 환경 단체도 원칙적으로는 부지 선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날의 시행 착오를 거울삼아 어느 곳을 어떤 절차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6. 원자력 정책에 대한 태도

평화적 이용을 위한 앞으로의 원자력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단체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55.4%) 현재 수준의 유지(15.4%), 감소(21.5%), 중지(6.2%) 등 비교적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환경 단체라는 범주 내에서도 원자력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주장과 의견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점에 있어 이른바 원자력 선진국 국민들은 대체로 더 이상의 확대를 원치 않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원전 건설에 대해 10% 남짓이 찬성하지만 60% 이상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만 유지하기를 원하며, 프랑스도 대다수는 현상태 정도를 유지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각기 다른 여건을 가진 형편을 무시하고 국가간의 여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나 대중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에 속한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 가운데 전문 지식에 의한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은 원전을 감소시키거나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어 다른 목적을 가진 단체들과 대조를 보였다.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정보는 잘 공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61.9%). <환경운동>지가 94년 10월 서울의 대학생 908명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에서도 원자력 정보가 '잘 공개되고 있다'는 의견은 극소수 (1.87%)이고 공개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 주종을 이루었다('전혀 공개적이지 못하다' 56.1%, '미비하지만 어쩔 수 없다' 19.1%).

일반 국민 대상 조사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70%를 넘었다(93년,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다만 이번 조사에서 회원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추구하는 단체들은 원자력 관련 정보의 공개에 대해 동감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원자력에 대한 정보가 잘 공개되고

<표 2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개발 계획에 대한 태도

구 분	단체수	%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다	7	10.8
서서히 늘리는 것이 좋다	29	44.6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10	15.4
현재보다 감소시키는 것이 좋다	14	21.5
모두 중지시키는 것이 좋다	4	6.2
무응답	1	1.5
계	65	100.0

<표 22> 단체의 설립 목적별 원자력 개발 계획에 대한 태도

원전 개발	정보 제공		대중 계몽		권리 추구		갈등 중재		대안 제시*		계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증설 찬성	9	64.3	13	68.4	11	73.3	1	33.3	4	22.2	35	56.5
현수준 유지	3	21.4	1	5.3	1	6.7	-	-	4	22.2	9	14.5
감소/중지	2	14.3	5	26.3	3	20.0	2	66.7	10	55.6	18	29.0
계	14	100.0	19	100.0	15	100.0	3	100.0	18	100.0	62	100.0

주 : *, p=0.02

〈표 23〉 원전 관련 정보의 공개에 대한 인식

정보 공개가 잘 되고 있다는 데 대한 인식	정보 제공		대중 계몽		권리 추구		갈등 중재		대안 제시*		계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매우 동감함	2	13.3	5	26.3	2	13.3	-	-	6	33.3	14	22.2
동감하는 편임	2	13.3	1	5.3	6	40.0	-	-	1	5.6	10	15.9
동감하지 않음	11	73.3	13	68.4	7	46.7	3	100.0	11	61.1	39	61.9
계	15	100.0	19	100.0	15	100.0	3	100.0	18	100.0	63	100.0

주 : * : p=0.013

〈표 24〉 원자력 발전 관련 사항 중 알고 싶은 내용

알고 싶은 원자력 분야 (중복 응답)	환경 단체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계	
	매우 동감함		동감하는 편임		동감하지 않음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원전 안전성	19	70.4	20	52.4	2	66.7	41	65.1
방사성 폐기물 처리	24	88.9	27	81.8	2	66.7	53	84.1
원전 필요성	2	7.4	4	12.1	-	-	6	9.5
방사능 인체 영향	9	33.3	13	39.4	-	-	22	34.9
원자력과 환경 관계	17	63.0	15	45.5	1	33.3	33	52.4
원전과 지역 사회 관계	11	40.7	19	57.6	2	66.7	32	50.8
원자력 정책	10	37.0	14	42.4	2	66.7	26	41.3
기타	2	7.4	1	3.0	-	-	3	4.8
계	27	-	33	-	3	-	63	-

〈표 25〉 원자력 교육이나 견학시 참가 의사

교육/견학시 참가 의사	환경 단체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계	
	매우 동감함		동감하는 편임		동감하지 않음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반드시 참가	10	38.5	4	12.5	-	-	14	23.0
가급적 참가	11	42.3	24	75.0	2	66.7	37	60.7
참가 의사 없음	5	19.2	4	12.5	1	33.3	10	16.4
계	26	(42.6)	32	(52.5)	3	(4.9)	61	100.0

주 : * : p=0.077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정보의 범위와 성격을 어떻게 전제하는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

원자력 문제가 기술적인 성격상 이

해 전달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정보를 제공하는 측은 일반 국민에게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환경 단체는 그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 문제이다.

여기에 의사 소통의 기술이 필요하다. 과학 기술을 다른 일상사처럼 자유자재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은 제한적일지 모르나 정보 수용자의 지식과 이해 수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요구할 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 한다.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이 그 해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환경 단체들은 원자력 관련 사항 중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가장 알고 싶어 하고 있었다(84.1%).

그 다음으로는 원전의 안전성(65.1%), 원자력과 환경 관계(52.4%) 등이 주로 환경 단체가 알기를 희망하는 내용들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만일 정부나 연구소 등에서 원자력에 대한 교육이나 견학을 실시할 경우 참석하겠다는 의견이 83.7%나 되어 환경 단체들의 참여 욕구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계에 대해 환경 단체와의 의견 조정을 위한 좀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환경 단체 또한 보다 유연한 시각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 필요가 있다.

7 원자력발전소와 지역 사회 관계에 대한 인식

원자력 발전 자체에 대한 필요성과 여러 긍정적인 측면들을 이해하는 가

(표 26) 원전 건설시 지역 발전 기여도에 대한 인식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데 대한 인식	규제/지도를 받음		자문/심의를 담당		정책정보의 제공		정책의 비판/수정		계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매우 동감함	-	-	-	-	-	-	-	-	-	-
동감하는 편임	10	55.6	6	60.0	4	23.5	1	9.1	19	35.8
동감하지 않음	8	44.4	4	40.0	13	76.5	10	90.9	34	64.2
계	18	100.0	10	100.0	17	100.0	11	100.0	53	100.0

(표 27) 원전 관련 시설 건설시 주민들의 반대 이유

원전 시설 반대 이유 (중복 응답)	규제/지도를 받음		자문/심의를 담당		정책정보의 제공		정책의 비판/수정		계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단체수	%
주민들의 이해 부족	7	35.0	4	44.4	6	31.6	4	36.4	20	35.7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	3	15.0	2	22.2	1	5.3	3	27.3	9	16.1
비공개적인 사업 추진	4	20.0	2	22.2	8	42.1	6	54.5	19	33.9
생업상의 지장 초래	3	15.0	1	11.1	6	31.6	3	27.3	12	21.4
반대 세력의 영향	1	5.0	-	-	1	5.3	1	9.1	3	5.4
안전/건강상의 위험	7	35.0	1	11.1	7	36.8	2	18.2	16	28.6
계	20	-	9	-	19	-	11	-	56	-

운에서도 실제 원전이 건설되면 그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단체가 64.2%였다.

원자력 관련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 (35.7%)과 '비공개적인 사업 추진' (33.9%)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용상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충분한 설명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환경 단체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28.6%의 단체들이 '안전성과 건강상의 위험' 이유로 들고 있고 '반대 세력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4%에 불과했다.

이를 종합하면 환경 단체들은 원전이 그 지역의 거주 여건을 악화시키고 따라서 지역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원전 지역 주민들은 취업의 기회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대되며 교통이 편리해진 점 등을 지역 발전에 기여한 효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보고이다.

긍정과 부정의 서로 다른 측면을

두고 어느 요소에 더 많은 비중을 들 것인가는 항상 선택의 상황에서 뒤따르는 일이다.

문제는 충분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이 내려지는 풍토와 사회적인 역량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결론

본 조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단체의 설립은 88년을 고비로 활발해졌으며 본 조사 대상 단체들의 약 70%가 90년 이후에 설립되어 활동의 역사는 대체로 짧은 편이다.

이들 환경 단체들은 현대의 환경 문제가 과학 기술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과학 기술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가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둘째, 원자력 발전 이용의 필요성이나 경제성 및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기여 효과에 대해서 환경 단체들은 긍정적이다.

다만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시각을 달리하는 단체는 약 10개 정도에 이른다.

또한 실용화의 가능성 여부는 별도로 환경 단체들은 대체 에너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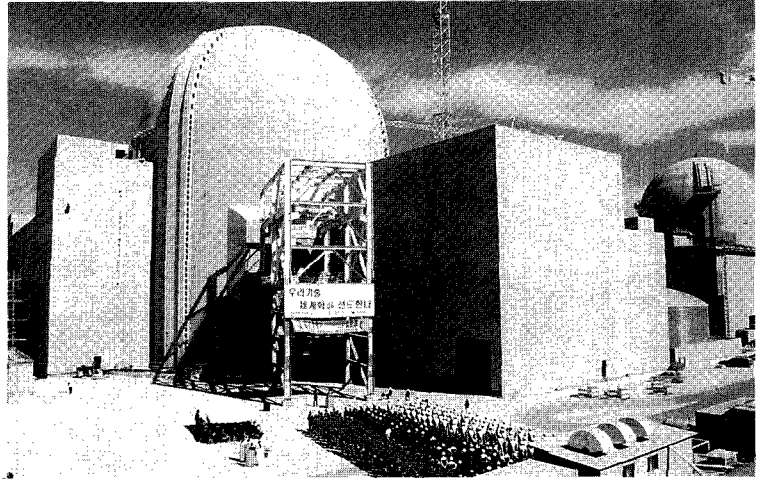
셋째, 원자력 발전 분야에 있어 한국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거나 약간 뒤떨어지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단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설계나 구조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체르노빌에서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넷째, 국내에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는 대체로 안전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단체가 많으며, 앞으로는 부지를 선정하여 영구 처분해야 하고 사용후 핵연료는 재처리 후 다시 원전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상 가동중인 원전으로부터도 방사능이 유출된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원전의 건설이나 운영상 '안전성' '환경 공해'를 가장 중시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나 '기술 자립'은 중시해야 할 사항으로서의 우선 순위가 낮다.

다섯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개발 계획의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환경 단체간의 의견이 매우 다양한 편이다.

원자력과 관련된 정보는 잘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가운데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식, 원전의 안전성, 환경 영향 등의 내용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있으며, 원자력 교육이나 견학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로 참가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건설중인 울진 3·4호기. 원자력 분야는 환경단체의 관심이 큰 분야로서 환경단체의 원자력에 대한 시각은 원자력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섯째, 원전이 건설될 지역은 이로 인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다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관련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주로 '비공개적인 사업 추진'과 '주민들의 이해 부족' 또는 '안전과 건강상의 위협'이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로 보아 원자력을 보는 환경 단체의 시각은 다른 일반 국민 대상의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즉 현실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장점들은 인정하되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며 방사능에 대한 불안이 인식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원자력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점이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는 데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원자력 분야에 대한 환경 단체의 참여 의사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의 추진 과정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 나타난 대부분 환경 단체의 기본 시각은 원자력 발전의 이용에 대해 합리적인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시각을 달리하는 10~20%의 단체들은 원자력에 대해 강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바, 이들의 일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의 강도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책 당국과 원자력 사업을 추진하는 측은 환경 단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건전한 비판 기능을 갖춘 갈등 조정자로서 기능이 있다는 측면을 보다 중시하고, 부정적 입장에 있는 환경 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의 접근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